# 김삿갓 방랑 멎은 자리…화순 '이서 적벽' 42년 만에 개방

# 광주시-화순군, 상생사업 협약식·적벽제 개최키로 다음달 23일부터 일반 공개…탐방객 사전예약제 도입

호남권의 대표 절경인 이서 적벽(赤壁) 이 42년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된다.

이서 적벽 개방은 민선 6기들어 광주・ 전남의 상생을 기치로 내건 윤장현 광주 시장이 구충곤 화순군수의 제안을 받아 들이면서 이뤄졌다.

22일 광주시와 화순군에 따르면 윤장 현 시장과 구충곤 군수는 10월 6일 광주 시의 상수원보호구역인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내 적벽 개방 등의 내용을 담은 상 호 협약서 교환식을 갖고, 같은달 23일에 는 이서 적벽 현장에서 개방행사 및 이서 적벽제를 개최하기로 했다.

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위치한 적벽은 지난 1982년 전남도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됐으며, 앞 서 1973년 5월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수몰지역민에 한해 설, 추 석, 한식날 등에만 벌초·성묘를 허가하 고 일반인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돼 왔다. 화순군은 지난 2012년부터 동복댐 관

리 권한이 있는 광주시를 상대로 화순 8 경 중 으뜸인 적벽의 개방을 요청해 왔으 며, 광주시는 민선 6기 광주·전남 상생발 전 사업의 하나로 개방을 최종 결정했다.

이에 따라 화순군은 다음달 23일부터 적벽 개방에 따른 관리·운영을 맡게 되 며, 탐방객 제한을 위한 사전예약제가 도

25인승 전용차량(버스)으로 주 3회, 1 일 2회(오전, 오후)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며, 임도를 이용해 망향정(望鄕 停)까지 이동한 뒤 관람하게 된다. 다만 겨울철 3개월간(12월 ~2월)은 안전 등 을 이유로 개방행사를 중단할 계획이다. 또한 적벽 개방에 따른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, 쓰 레기 투기 등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.

윤장현 시장은 "광주시민의 식수인 수 돗물이 화순 동복에서 제공되는 만큼 개 방에 따른 관리 등도 철저히 하겠다"면서 "특히 그동안 소원했던 광주 인근 나주,



화순군 이서면 동복댐 내에 위치한 이서 적벽이 다음달 23일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다. 이서 적벽과 어우러진 동복 수원지의 모습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하다.

담양, 장성, 함평 등 5개 시·군과의 상생

프로그램 등도 강화하겠다"고 말했다. 한편 이서 적벽은 화순군의 동북쪽 이 서면 장학리 동복댐 내에 위치한 절벽이

다. 조선 선조 때 고경명(1533~1592)의 무등산 기행문인 유서석록(遊瑞石錄)에 따르면 애초 석벽으로 불렸으나 기묘사 화로 동복에서 유배생활을 한 신재 최산

두(1483~1536)가 중국 양쯔강(양자강) 상류에 있는 적벽과 비슷하다고 해 이서 적벽으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. 특히 동복천의 상류인 창랑천 유역과 무

〈광주일보 자료사진〉 등산에서 발원한 영신천의 잔잔한 물 위 로 비치는 적벽의 모습은 한 폭의 수채화 를 그려놓은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절 /박진표기자 lucky@

#### 공무원 노조 저지…새누리당 특위 내달중 개혁안 확정키로



공무원노조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 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연금개혁에 항의하고 있다.

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 의 저지로 무산됐다.

한국연금학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 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'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 론회'를 열 예정이었지만, 공무원노조 지도 부와 노조원 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"연금개혁 해체', "새누리당 해체'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오전 10시27분 토론회 취소를 선언했다.

노조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회의장 앞

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 쪽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구호를 복창했으 며, 일부 노조원들은 욕설을 하고 호루라 기를 불며 "김무성을 규탄한다" 등의 구 호도 외치기도 했다.

>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 책위 부의장,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 원장 등은 이 같은 소란 속에 토론회를 진 행해보려 했으나 소음과 반발이 너무 심해 포기하고 20분여 만에 퇴장했다.

> 당 경제혁신특위는 이후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정리해 확정할 예정이다.

#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무산 퇴직 후 1인당 5억3천만원 받아 보험료 1억4천…4억은 국민 부담

### 공무원 연금 분석

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원 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.

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납입한 보험료는 평균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정 된다. 이에 따라 정부가 순수하게 부담해 야 하는 금액은 공무원 1인당 4억원 안팎 으로 계산된다.

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연금자체가 공무 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복지를 보전하기 위 한 것이어서 연금 수준이 많다고 보기 어 렵다고 지적하고 있다.

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 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 우고 있어, 정부는 앞으로 지급할 연금을 모두 부채로 충당해야 한다.

2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 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 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 채가 평균 5억2700만원에 달했다. 이는 공 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 액을 제외하고,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다.

이런 개념을 '연금충당부채'라고 한다. 작년 말 시점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 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 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다.

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(32만1098명)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이다.

물론,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 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 험료(기여액)를 납부한다.

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 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,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(기 여액의 현재가치 대비 급여액의 현재가 치)는 3.68이다.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.68배라는 의미다. 이를 연금충당 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가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300만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.

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"국민이 부 채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공무원 한 명당 4 억원에 이른다"고 지적했다.

## "개천절 행사, 대통령 참석해야"

### 국학원 등 33개 시민단체 청원

국학원과 인성회복국민운동본부 등 33개 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천절 행사 에 대통령의 참석을 요구하는 등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.

이들 단체는 "올해로 4347번째를 맞는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상

징하는 국경일"이라며 "하지만 5대 국경 일 중 유일하게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경축행사로 진행되고 있다"고 지적했다.

3·1절·제헌절·광복절·개천절·한글닐 등 5대 국경일 가운데 3·1절과 광복절 등 의 행사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고 있 지만, 개천절의 경우 지난 노태우 정권때 부터 국무총리가 참석해왔다고 이들은 /연합뉴스

# 전남 1만5천가구 여전히 연탄 사용

전국 100가구 중 0.84가구가 연탄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연탄은행 은 22일 "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2014년 연탄사용가구를 조사한 결과 전 국적으로 16만8473가구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"고 밝혔다.

이는 전국 총 가구 수 대비 0.84%에 해 당하는 규모다.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 남은 1만5000여 가구로, 경북(4만7000여 가구), 강원(3만4000여 가구)에 이어 3번 째로 많았다. 가구 수 대비 연탄사용가구 비율은 강원이 5.3%로 가장 높았다.

특히 전국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대부분은 수급자·차상위·소외가구였고,

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조사됐다. 이에 따라 단순히 기름보다 가격이 저 렴해서기보다는 가계부담을 덜고 난방 비를 줄이고자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. 2006년 27만여 가구를 정점으 로 매년 감소하던 연탄사용 가구도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. 2014년 연탄사용가 구는 2011년 15만7000여 가구보다 6.7% 늘어났다. 밥상공동체복지재단과 서울 연탄은행은 원인으로 저성장, 소득 감소, 서민물가 인상 등을 꼽았다. /연합뉴스



